이태원 참사 유족들

"오세훈·서울시 수사하라"

민변·참여연대 등과 특수본에 2차 촉구서 전달 "현장 대응 한계 있다"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대비못한 서울시를 수사하라' 기자회견에서 희생자 유가족이 눈물을 닦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에게 이태원 참사를 대비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일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도 책임져라,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일선 경찰과 소방, 구청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특수본에게 서울시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10·29 참사 대응 TF' 팀장인 윤복남 민변 변호사는 "서울시는 다중인파가 몰릴 경우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재난상황실을 운영해 참사에 대응해야 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진실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도 "특수본은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 못 한 사람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 중이다. 하지만 실제 책임질 사람은 대규모 인파 밀집 상황에서 대책을 안 세운 사람이다. 대규모 인파가 몰린 상황에서 현장 대응은 한계가 있고, 사전에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10월 27일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보고가 올라갔는데도 기본적 대책 설립을 하지 않아 대규모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최종연 민변 변호사는 "곧 참사 발생 40일인데, 특수본이 입건한 20명 넘는 피의자 중 서울시 관계자는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후 2시께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대상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달라는 수사촉구서를 특수본에 팩스로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 1일에도 특수본에 서울시, 행정안전부의 수사를 촉구하는 수사촉구서를 보냈다. 특수본 측은 '접수됐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단체들과 유족 측이 보낸 의견을 충분히 수사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족들은 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눈물을 흘렸고, 회견이 끝나자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하루아침에 이게 무슨 일이냐",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라며 오열했다.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고(故) 이남훈씨의 어머니는 "비오는 날에는 미끄럼 조심하라는 안전문자까지 보내면서, 왜 그날에는 (인파가 몰린다는) 안전문자를 보내지 않았냐"며 "축제에 참여하는 국민도 국가로부터 보호 받을 권한이 있다.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부모에게 관심을 보이고 진정어린 사과를 부탁한다"고 했다. /뉴시스

"연말, 소외계층에 큰 힘을"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전주12)은 8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도민들이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동참해주길 간곡히 부탁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날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이선홍 회장, 봉사회 전북협의회 최정숙 회장, 전북지사 박종술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국주 의장은 "기후 위기로 재난재해가 빈번하고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도 늘고 있어 적십자사의 구호 활동이 절실하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적십자회비 모금에 도민들께서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동참해 주신다면 소외계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2022년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행사를 진행한다. 모금 목표액은 12억 6,000만원이다. /김경수 기자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제도 도입

새만금사업 추진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도입 근거를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투자진흥지구 도입은 2020년 개정법안 발의 이후 2년 여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줄곧 답보 상태에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새만금사업의 성공과 이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제도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국회도 여야가 한 마음으로 전향적인 검토를 거쳐 법안 개정의 결실을 맺게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북지역 정치권과 전북도가 합심해 지역의 핵심 현안으로 투자진흥지구 도입을 전면에 내세우고, 국회와 관련 부처 설득에 많은 공을 들였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을 지정해 입주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일종의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는 현재 제주와 광주 2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제주의 경우 2021년 말 기준 40곳을 지정해 약 9조2,100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내년 4월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해제에 따른 세제혜택 등의 종료를 앞두고, 시의적절하게 도입되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의 가속화뿐만 아니라 군산을 포함한 전북지역 전반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청은 투자진흥지구를 기반으로 대규모 우량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새만금을 첨단전략산업의 요충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고창군의회 등,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절차 중단 촉구

"세계적으로 유례 찾기 힘든 부실투성이 발전소"

"원안위, 막대한 책무 엄중히 받아들여야"

지난 7일 열린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절차 중단 촉구 긴급기자회견.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고창군의회 임정호 의장, 고창군의회 한빛원전조사특별위원회 임종훈 위원장, 조규철 의원 3인은 지난 7일 한빛원전을 직접 찾아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방문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항의방문에 앞서 고창군의회 한빛원전조사특별위원회 임종훈 위원장과 조규철 의원은 고창군 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승인 중단 촉구를 위해 지난달 30일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항의방문했다.

한빛4호기는 격납건물에서 140여개의 공극이 발견되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17년부터 5년 이상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한빛4호기에 대한 재가동 전 정기검사 결과를 보고 받았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최종 결정을 미룬 상태이다.

먼저 임정호 의장, 임종훈 위원장, 조규철 의원 3인은 한빛원자력본부장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한목소리로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절차가 진행되면서 고창군민이 느끼는 불안감을 전달했다.

이후 이루어진 기자회견은 고창군의회를 비롯한 전북도의회, 부안군의회, 정읍시의회,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실시되었으며 이들 모두 한목소리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막대한 책무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위험천만한 한빛4호기 재가동 승인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고창군의회 조규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한빛원전 4호기는 140개의 공극 발생과 철판 부식 등의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어 5년 이상 가동이 중단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부실투성이 발전소"라고 외치면서 "철저한 안전성 검증이 담보되지 않고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최고조인 지금의 상태에서 진행되는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북유럽의 선진정치 어떻게 받아들일까

지방자치발전연구회 명사 초청 특강 가져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대표 박정규 의원)는 지난 7일 의원총회 의실에서 '북유럽 선진정치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주제로 명사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은 구수환 (사)이태석 재단 이사장과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의 강의와 정종인 광남일보 논설위원 사회로 토크쇼가 진행됐다.

구 이사장은 지난 30여 년간의 저널리스트 생활을 회고하며, 정치 과정에서 신뢰의 덕목이 지닌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의 다큐멘터리 촬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란 공감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민이 행복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정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연혁 교수는 글로컬리제이션의 대두와 스웨덴의 지방정치 혁신 사례를 설명하며 "성공한 지방이 있을 때 성공한 국가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염영선 의원은 "이번 특강을 통해 한국의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볼 수 있었다"며 "전북도의회가 북유럽의 선진정치보다 우수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김경수 기자

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세부 예산심사

임승식 도의원

김성수 도의원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 전주2)는 8일 '2023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교육국과 전북교육연수원 등 13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어졌다.

임승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1)은 도내 교직원 간 성관련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교직원의 성교육 예산 증액과 교육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으며, 이와 함께 학생들의 성인지 교육도 더욱 확대해 성인지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도내 학교의 돌봄교실 공간이 부족한 점을 꼬집으며, 지자체의 유휴공간 활용을 위해 도 교육청에서 각 지자체와 협의 등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형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2)은 도내 청소년 자살시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재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학생 심리상담 지원에 대한 도교육청의 특단의 조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학생들의 고민 해결을 위한 연구 및 사업 발굴을 주문했다. /김경수 기자

전주시의회 예결특위, 집행부 예산 심사 돌입

전주시의회 최주만 위원장 및 14명의원들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올해 3차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홍보담당관과 국제협력담당관, 기획조정국의 예산안을 심사 첫날 검토했다.

이날 홍보담당관에 대해 예결위는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된 '전주다움' 예산안에 대한 담당관의 견해와 각종 홍보 간행물별 단가의 차이가 큰 점에 대해 따져 물었다.

국제협력담당관에게는 전주 글로벌 컨퍼런스의 경제적 효과와 청년 참여 분야의 홍보계획을 묻고, 컨퍼런스가 단발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꼼꼼한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또 기획조정국은 전주기업반 취업지원사업의 상임위 예산 삭감 사유와 주요시책 추진지원 예산의 의전 업무 사용 이유 등을 확인했다.

예결특위 활동은 오는 15일까지 9일간 이어지며,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16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최주만 예결특위 위원장(사진)은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선심성 예산편성 등 예산 낭비 요인이 없는지 확인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기자

'허위사실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공소사실 전면 부인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과 정 시장 측은 '민간공원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이 진행될 전망이다.

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정 시장 측 변호인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성상 수익은 확정돼 있다"며 "초과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공원사업에 투자되는 구조여서 민간이 가져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서에 나온 문구 하나하나가 법률적으로 따지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나, (토론회 발언은) 환수여부에 대한 설명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한 발언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님으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정 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에 열린다.

정 시장은 지난 5월 24일 진행된 TV토론회에서"민간공원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시장은 당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발언했다. /뉴시스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